

# 2026년까지 6.7조 투입... 주택·주거비에 스투메까지 지원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무주택 신혼에 '미리 내 집' 1000호 거주기간 10년, 자녀 낳으면 20년 일·생활 균형 실현 중소기업 인센티브 육아용품 반값 온라인몰 내년 오픈

서울시가 저출생 반등의 희망을 잡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 결혼 살림비 지급, 육아용품 반값 할인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6조 7000억원을 투입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저출생 정책 수혜 대상을 기존 양육자에서 신혼부부, 난임부부로 넓혀 출산·육아·돌봄뿐만 아니라 주거, 일·생활 균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전방위 지원을 펼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1을 통해 시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난임시술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등을 실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시는 이 같은 정책적인 노력으로 저출생 추세가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4~8월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늘었고, 출생아 수의 선형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5% 증가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의 일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서울형 저출생 주거 대책 ▲일·생활 균형 정책 ▲양육자 생활 밀착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올해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 내 집'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물량을 내놓을 계획이다. 미리 내 집은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신혼부부를 대

으로 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0년간 살 수 있으며,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을 연장해준다. 자녀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급을 시작한다. 2025년엔 1380가구를, 2026년에는 41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육아 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근무시 6개월간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 휴직을 하면 대직자에게 1년간 월 10만원 씩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지원에도 팔을 걷어 붙인다. 1인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인 임산부에게는 90만원의 출산 급여를 주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80만원을 지급한다.

(예비)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 혁명 정책도 추진한다. 신혼부부들이 스

스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나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결혼 살림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2만가구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3월 시는 필수 육아 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탄생응원 몰'을 오픈할 예정이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이 돌봄도 정책도 강화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에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25개 전 차지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hjk1@metroseoul.co.kr

>> 1면 '사전청약 후폭풍'서 계속

## “北, 러시아 파병 3000명 파악... 연내 1만명 넘을 듯”

국정원, 국정감사 브리핑  
고위급 군 장성 포함 가능성  
장교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병사·가족들 입단속 정황 포착

국가정보원은 29일 러시아에 파병된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북한군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이 입단속을 했음에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파병 소식이 퍼져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정부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양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파병 규모는 현재까지 3000명, 혹은 이보다 많은 숫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또 연말까지 총 1만900명이 파병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선 투입 여부는 확인해지지 않았다.

이성권 의원은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이동했다고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 정권이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차출부대 소속 병사들의 경우 입단속과 함께 가족들에게는 훈련을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라는 주민과 군인들의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파병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위장파병’으로 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북한군의 군복을 입거나 북한군 체제로서 들어간 게 아니라 러시아가 준 군복, 러시아가

준 무기, 러시아 체제 속에 편입된 상태라 파병이 맞긴 하지만 위장파병이 맞는 것이냐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원들에게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파병과 관련해 고위급이 오간 사실도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 23~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하는 러시아 정부의 특별기에 북한군 파병에 관여하는 러시아 안보 핵심관계자가 탑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파병으로 인한 국제 사회 반발과 관련된 의견 조율이 목적이었고,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것도 이번 방북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정원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신조약 체결 이후 경제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물 등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금수품 교역에도 이면 합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로의 노동자 공출도 꾸준히 이어졌고, 올해 들어 4000명의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 기자 syj@

## “지연기간 등 신속안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 수립 지원”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을 시작으로 경남 밀양 북부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인천 영종A41블록 등에서도 사전청약을 통한 사업이 취소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요가 부진한 곳도 있지만 동탄과 운정 등 수도권 인기 지역도 시행사들이 손을 들었다. 공사비는 올랐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됐다. 파주 운정 주상복합 3·4블록의 시행사였던 DS네트웍스도 관련 인허가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공공택지를 맡겼다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의 경우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1만 가구가 넘는다.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 취소는 없었지만 본청약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2021년 7월 1차 사전청약 단지부터 본청약 일정을 맞추지 못했고, 2021년 10월 2차 사전청약 지구에서는 성남 북정2와 군포대야미 등 본청약이 3년 이상 늦어지게 된 단지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에서 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지만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이나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온라인 쇼핑 증가, 물가 끌어내린다”

KDI, 온라인 소비 확대 영향  
1%p 상승시 물가상승률 0.07%p ↓  
숙박·음식점업 등 일자리수는 감소

온라인 소비의 확산은 물가 오름세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 반면,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문 고용부진을 초래한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온라인 소비가 1%포인트(p) 늘면

상품 물가의 상승률은 0.07%p 둔화했다. 그러나 일자리 수는 숙박·음식점업에서 2만3000명, 도·소매업에서 1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총괄은 29일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KDI 현안분석-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의 비중은 지난 2017년 14%에서 2024년 27%까지 확대됐다. 이는 해당 7년간 소비자물가를 2.4% 낮췄다는 분석이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p 커지면 당해 연도 상품 물가상승률이 0.07%p 하락하는 효과를 냈다.

김총괄은 온라인 소비와 밀접한 3개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의 취업자 수를 고용변수로 사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업종별로 상이했지만 대체로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는 충격이 발생한 1~2개 분기 후 영

향이 극대화됐다. 1~2년 후에는 그 영향이 사라졌다.

고용 반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이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p 늘어났을 때 이 부문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개 분기 후 최대 2만 7000명 축소됐고 약 2년간 유의미한 파급 효과가 지속됐다.

도·소매업도 같은 분기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최대 2만 7000명 축소됐다. 반면, 운수·창고업 등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서예진 기자 syj@